

SNS의 위력과 정치 변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김상배(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12년은 한국사회에 큰 정치변동의 물결이 밀려올 것으로 예견되는 해다. 무엇보다도 향후 4~5년간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큼직한 정치 일정들이 잡혀 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정치 리더십도 교체될 예정인 만큼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정치변동을 감상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유난히 관심을 끌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가히 'SNS 혁명'이라 부를 만큼 통념을 뛰어넘는 일들이 SNS로 인해 벌어지곤 한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보면 아마도 2012년은 SNS가 정치적 위력을 여실히 발휘하는 해로 기록될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가 흔히 영어 약자로 표기하는 SNS는 온라인상에서 다수 사람들의 관계 맺기를 도와주는 인터넷 서비스다. PC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에 더해 최근에는 모바일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면서 SNS의 사용이 더욱 활발해졌다. 사실 SNS는 서비스라기보다는 미디어로 보아야 한다. 단순히 아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차원을 넘어 기성 미디어처럼 뉴스를 담아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역할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SNS는 기성 미디어와는 달리 사람들이 맺은 사회관계의 연결망을 타고 작동한다. 이런 점에서 SNS는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라고 불린다. SNS나 소셜 미디어라는 말은 모두 우리말로 번역되기보다는 다소 생경한 알파벳의 조합이나 음차어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 생긴 이유로는 언어의 번역이 매울 수 없는 '의미의 공백'에 대한 망설임도 있겠지만 우선 이 용어들에 담기는 현실의 낯설음을 꺾어야 할 것 같다.

소셜 미디어로서 SNS를 매개로 형성되는 사회관계는 우리가 단순히 '소셜'이라는 말로 지칭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가 보통 사회^{society}로 번역하는 'society'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2차 집단'의 사회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SNS를 통해서 형성되는 소셜 네트워크는 이러한 이익 기반의 관계 맺기만은 아니다. 오히려 구성원들이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구성하는 공동체^{community}, 즉 '1차 집단'의 사회관계를 배경에 깔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SNS의 소셜 네트워크는 공동체(1차 집단)와 사회(2차 집단)의 중간 정도가 되는 '1.5차 집단'의 사회관계를 배경으로 작동한다.

트위터의 사례를 보자. 트위터는 대면관계의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는 광범위한 사회관계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트위터에서 정보의 전달은 매스미디어의 경우처럼 누구에게나 골고루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트위터의 핵심은 리트윗^{retweet}이다. 내가 받은 정보를 누군가에게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트위터를 통해 정보를 리트윗하는 대상은 생면부지의 남은 아니다. 또한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트위터에서 팔로우하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는 타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트위터는 친한 지인들을 상대로 물어보고 알려주는 모델이다. 트위터는 공식적인 관계가 확장되는 외중에도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는 사용자들의 심리를 공략한 모델이다. 이러한 점에서 트위터의 확산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성'의 확대뿐만 아니라 '근접성'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트위터가 활용하는 사회관계의 복잡성은 거기에 담기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내용의 복잡성으로 나타난다. 기성 미디어와는 달리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는 해석과 주관적 편집, 선별과 감정이 담긴다. 트위터에서는 내가 머리로 동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공감하는 '말'이 리트윗된다. 정보를 획득하는 채널인 동시에 감정을 공유하는 채널인 것이다. 다시 말해 트위터에서는 객관적 정보의 전달과 소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교환과 더 나아가 정서적 공감도 중요하다. 이렇다 보니 전달된 정보의 내용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한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트위터의 소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점에서 트위터의 팔로워 커뮤니티는 유명 연예인들의 팬클럽에 비견되기도 한다.

SNS를 활용한 소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성격도 복잡적이

다. 구전 미디어가 사적^{私的} 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은 이야기를 전했다면 매스미디어는 공적^{公的} 공간에서 이뤄지는 큰 이야기를 널리 전파시켰다. 그런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공사^{公私}'의 복합 공간¹이다. 예를 들어 트위터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적 공간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공적 공간이다. 구전^{口傳} 미디어의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지듯 리트윗도 그 구조와 논리는 입소문과 다를 바 없다. 트위터는 예전 같았으면 사적 공간에서 친구들과하고만 나눴을 법한 이야기를 "내가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말이야."라면서 공공장소에서 털어놓는 것과도 같은 모델이다. '골방 모델'과 '광장 모델'의 복합 모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리트윗되면서 전파되고 추가 정보들이 더해지면서 정보의 퍼즐 맞추기를 하는 복합 공간이 생겨난다.

이렇게 복합적인 성격의 소셜 미디어인 SNS는 사람들을 결집하여 유례없는 사회적 파장과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SNS가 발휘하는 위력의 핵심은 널리 소수자들을 결집하는 힘에서 나온다. 예전 같으면 묻혀버렸을 작은 이야기들이 SNS를 통해 개진되고 널리 퍼져나가 활발한 참여를 유발하고 있다. 우리는 SNS를 통해서 그야말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네트워크 형태로 작동하는 새로운 권력을 본다. 이러한 권력은 기존에 군림해 온 지식권력에 대해 지식질서의 구조 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SNS, 좀 더 넓게는 인터넷이 발휘하는 정치적 위력을 실감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벌인 2008년 촛불집회는, 예전 같았으면 지식엘리트

의 전문 영역이었던 분야에서 SNS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세력이 대항 전선을 펼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벌어진 외교안보 논쟁도 SNS와 인터넷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정치현상임이 분명하다.

소셜 미디어로서의 SNS의 위력이 관심을 끄는 안건 중의 하나는 과연 이것이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기성 미디어를 대체할 것인가의 문제다. SNS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기사를 생산하여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과 전문기자의 역할과 권위를 나누던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SNS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좀 더 빨리 뉴스를 전달하고, 나아가 기성 미디어의 프레임에 잡히지 않던 숨겨진 어젠다들을 발굴하기도 한다. 소셜 미디어로서의 SNS가 기성 미디어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에 도전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대항프레임^{counter-framing}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컨대 SNS의 부상으로 미디어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프레임을 짤 것인가?’의 문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어젠다 플랫폼이 다변화하면서 SNS가 신문이나 방송을 대체할 가능성마저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최근 SNS가 팔목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 받는 이유는 소셜 미디어로서 SNS가 지향하는 기본 정신이나 철학이 전통 미디어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뉴스에 담기는 내용 자체의 정론성이나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통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는 큰 차이가 있다. 전통 미디어가 어떠한 형태로든 객관적인 뉴스 보도와 정치적으로 공정한 입장을 추구한다면 소셜 미디어는

객관성이란 이름 아래 자신들의 활동을 묶으려 하기보다 ‘이야기 전쟁’이 벌어지는 플랫폼만을 제공하려 한다. 그리고 나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닌 소비하는 사람이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철학이다.

이렇듯 SNS를 기반으로 한 소셜 미디어의 약진이 기성 미디어에 대한 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매스미디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셜 미디어는 매스미디어와 일정한 정도의 공존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 트윗 분석에 따르면 트윗되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매스미디어의 헤드라인 내용이라는 조사가 있다. 그러다가 가끔 자연재해라든지 속보 또는 숨겨져 있던 작은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을 대체한다. 아직까지 소셜 미디어의 주된 콘텐츠는 매스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SNS는 기성 매스미디어의 ‘반포^{頒布} 모델,’ 즉 생산자가 중심에서 뉴스를 뿌려주는 모델과 ‘유포^{流布} 모델,’ 즉 일반인들이 서로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뉴스를 전하는 모델의 복합 모델이다.

2011년에 치른 두 차례의 재보궐 선거는 SNS의 정치적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SNS의 실제 위력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것은 유권자들이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현실을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SNS는 정치에 무관심하던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안겨 주었다. SNS를 활용하여 ‘생각과 공감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전처럼 수동적인 청중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더 능동적인 참여

자의 역할을 찾아나섰다. 여기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SNS 기반의 '생각과 공감의 네트워크'가 어떤 경우에 '행동의 네트워크'로 전화되느냐의 문제다. 우리는 그 실제 사례를 최근에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 특히 '재스민 혁명'에서 보았다. 학계의 논의에 의하면 이렇게 생각과 공감의 집합이 실제로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구성원들 간의 '인식의 공유'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인데, 소셜 미디어로서의 SNS가 그러한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볼 때 2012년의 정치 과정에서도 SNS는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NS를 활용한 2030세대의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소셜 미디어로서 SNS의 활용이 보수와 진보 중에서 어느 세력에 더 유리하느냐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SNS도 미디어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미디어 편향성'이라는 것이 없지 않다. 일반적으로 SNS라는 미디어는 위계조직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의 사회관계, 그리고 보수 이념보다는 진보 이념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형태나 이념이라는 변수와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SNS가 젊은 세대에 좀 더 친화적이라는 사실이다.

흥미롭게도 SNS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의 거대한 정치담론이 아니다. 소위 투표인증샷놀이 등에서 엿보이는 바와 같은 생활정치 또는 재미정치의 작은 담론이다. 기성세대는 이러한 젊은 세대의 정치적 소통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니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SNS의 위력이 기존의 정당정치를 무력화시킬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한 화두다. 특히 2011년 10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가 여야 정당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뒤 정치학에서 중요한 화두는 과연 SNS의 시대에는 정당이 필요 없느냐는 문제였다. 박원순 후보의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의 지지자들에 비해 SNS를 더 많이 활용하여 결집되는 면모를 보인 것이 그 이유였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셜 대표를 내고, 그 대표가 직접민주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는 전망도 대두되었다.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SNS가 다수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나온 대표가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제대로 된 대표냐의 문제가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측면이 있다. 대표성의 균질성이란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참여가 증대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민주주의로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SNS의 시대를 맞이하는 정당정치의 미래를 예견해 보면, 우선은 SNS로 대변되는 변화에 민첩하게 편승하여 SNS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정당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가 야기한 변화를 도구적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다. SNS의 도입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그걸 담아내는 제도, 그리고 조직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방향 자체는 현대 정당의 변화 방향과도 맞다. 거대조직이 축소되고, 정책이나 비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SNS라는 채널을 통해 모이는 방식의 정당이 불가피하다. 물론 조직으로서의 정당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정당의 공적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 SNS의 권력이라는 것이 어디로 될지 모르는 권력이어서 누군가 끝까지 남아서 공적 부분을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 마치 국가가 역사적으로 계속 형태를 바꿔왔지만 어떤 형태든 국가는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SNS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실 태생적으로 SNS의 힘은 어디로 될지 모르는 힘이다. 마치 하이퍼텍스트의 구조를 따르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를 따라서 검색을 하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연상케 하는 힘이다. 평소에는 느슨한 고리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연결고리가 강해지면서 널리 확산되는 힘이다. 균질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벌떼들의 움직임처럼 우르르 쓸림 현상이 발생하는 힘이기도 하다. 이러한 속성이 있다 보니 SNS의 권력은 도마뱀의 꼬리 같은 권력이 되기 쉽다. 다시 말해 문제가 생기면 즉각 꼬리를 감추고 숨어버려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데가 없다.

이러한 SNS의 위력과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폭로와 루머의 확산,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의 문제다. 예전 같았으면 몇몇의 친구들만이 알았을 사생활의 비밀들이 SNS라는 확산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는 일들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SNS 커뮤니티의 자정 기능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자정 기능이 작동하여 결과적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동안 당한 사람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

는 경우가 많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SNS에서도 신뢰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신뢰는 선부른 감정의 동조보다 사실관계의 확인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SNS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을 논하기는 다소 이르다. 소셜 미디어로서의 SNS는 기성언론의 프레임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평등하게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140자 안에 주장과 증거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재치 있는 짧은 트윗이 선호될 수밖에 없다. 간혹 이러한 분위기가 풍부하고 성찰적인 사유를 나누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른바 '숙의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의 장점은 서로 다른 의견을 용인하고 참고 듣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그런데 SNS는 어떠한가? 트위터에서는 건설적인 토론도 많지만 듣고 싶어 하는 의견에만 동조하여 팔로우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동조하는 의견들이 급속히 네트워크되는 일종의 '눈덩이 효과'가 크다. SNS의 실험이 지니는 위력만큼이나 그 실험이 파생시킬 실패의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제학에 시장실패란 말이 있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또한 정부실패나 국가실패라는 말도 있다. 칼자루를 쥐니 자기가 좋은 대로만 쓰더라는 얘기가.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보면 사회실패나 SNS실패 또는 네트워크실패도 이야기할 수 있다. 시장과 정부, 그리고 사회는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SNS에서 네트워크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들어가 규제를 하는 건 해법이

아니다. 시장이 통제하는 것도 해법이 아니다. 항상 시장-국가-사회의 삼각형이 균형점을 찾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어쨌든 SNS는 정치에 무관심하던 세대에게 '뭔가 현실을 바꿀 수 있겠다'는 단초를 보여준 게 사실이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더라도 자체적인 자정 기능이 작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전체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 공공^{公共}의 목적을 갖고 계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소통·협력·창의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가치' 실현하라

김성태(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우리사회는 기술발전과 사회변화가 공진화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으로 진화해 왔다. 원시 수렵사회는 농업사회로, 그 후 산업기술 혁명에 따른 대량생산 기반의 산업사회로 변모했으며, 1990년대 이후 ICT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 확산이라는 '제3의 물결' 속에서 또 다시 지식정보사회로 거듭났다.

지식정보사회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ICT 신기술 융·복합 활성화로 사물, 시스템, 프로세스 등의 지능화에 기반을 두고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적 인간 중심의 가치가 강조되는 '스마트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사회의 ICT는 단지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수단^{enabler}에 불과했던 기존 사회와는 달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전환되었다.